

과학기술시대의 식생활정책을 진단한다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식탁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민건강 증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연결된 과학적인 식생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식량이 부족하여 매년 춘궁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30년이 지난 지금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춘궁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풍요로운 식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족한 식생활이 그동안의 과학적인 식생활정책 미비로 국민이나 국가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품오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폐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식량자급도 저하 및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건강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미비로 불량식품 범람

식생활정책의 미비로 인한 부정, 불량식품 문제가 매년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간편식의 대명사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면스프 원료에서 허용치의 수십 배가 넘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건강식품으로 가장 각광받는 인삼제품에서도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농약, 방사선, 호르몬제에 노출이 심한 수입 농산물은 인력,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육안, 냄새 검사만

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가공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자연식품인 채소, 과일도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제는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실정이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씻어줄 수 있는 장단기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갈수록 떨어져

60년대의 쌀부족으로 인한 분식장려운동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서구의 밀가루문화, 기름문화, 샐러드문화가 우리식탁을 장악하고 있다. 밀가루를 필두로 옥수수, 대두 등 기초 곡물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고,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고급 수산물의 수입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도 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싼 가격의 각종 채소, 양념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또한 우리가들을 풍성하게 하는 사과, 배, 감, 귤옆에 자몽, 바나나, 멜론, 키위 등이 당당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고, 음료시장의 기린이인 각종 과즙음료의 원재료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갈수록 낮아져(곡류의 경우 자급률은 35%) 식

량안보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식생활정책의 부재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맛이 서구음식에 익숙해지고 편의주의 식생활로 바뀌어 가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우리의 전통 식습관에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녹차, 구기자차, 결명자차, 생강차, 모과차, 유자차 등 독특한 향미와 약리작용으로 인기가 있었던 우리고유의 전통차들이 커피나 홍차, 콜라 등에 밀려난 지 오래다. 우리 전통의 빈대떡, 파전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리마다 피자집과 햄버거집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밥보다 빵을 즐기고, 김치보다는 샐러드를 좋아하고, 젓가락 사용보다 포크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마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제 세계 제11위 식량수입대국이 되었다.

건강식품 과대선전도 문제

그러나 식생활정책의 부재는 풍부해진 식생활로 인한 영양과잉과 잘못된 식생활로 이어져 만성퇴행성질환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우리의 건강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들 질환의 치료에 연간 1조5천억의 의료비가 쓰여지는 등 개인 및 국가의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가공식품의 선호로 도시어린이 비만이 14%에 이르고 있고, 어린이 성인병이 날로 증가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식품에의 관심이 날달리 지나쳐 건강에 좋다면 동물의 피, 애벌레까지도 서슴없이 먹고있고, 이러한 심리에 편승하여

일부 건강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선전되어 이것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부 다이어트식품의 남용으로 젊은 여성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데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식생활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영양실태도 파악 못해

우리나라 국민영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조사인 국민영양조사가 예산부족과 인식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조사된 식품섭취자료도 식품성분표가 미비하여 제대로 영양평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분석이 거의 안되어 있고, 성인병의 증가로 분석이 꼭 필요한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미량 영양소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과학적인 영양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식사요법이 필수적인 성인병이 나날이 증가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각종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영양적으로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성분표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건강과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조차도 식생활부분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아직도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우리의 식생활문제가 일부 소비자 및 전문단체의 문제제기만으로 끝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 수는 없다.

건전한 식생활의 유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고 국가의 식량수급정책, 수입농산물정책, 식품정책, 국가영양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식탁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민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연결된 과학적인 식생활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식량·영양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보장하는 관계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식량·영양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에 국가식량정책과 영양정책을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인의견 정책반영을

아울러 국가식량·영양정책 수행에 관여하는 농림수산부(식량자원관리), 보건사회부(국민영양개선, 식품안전성 확보), 경제기획원(국민식량·영양관리 종합계획 수립), 상공부(식품산업 육성), 과학기술처(국민식량·영양 연구개발), 교육부(학교급식 관리, 국민식량·영양교육), 노동부(집단급식관리, 근로자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부처의 업무의 중복·상충점을 해소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량·영양전문인 단체와 전문인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행정일선에서 업무수행자로서 전문인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농업의 피폐화와 자급률 하락에 의한 식량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영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립하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ST**